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 ‘국민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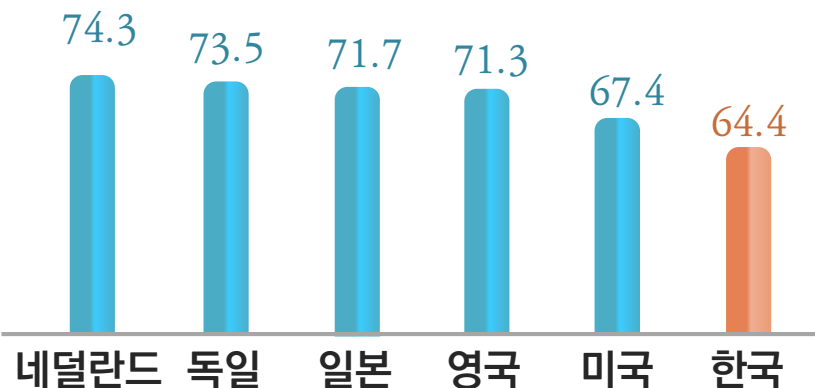
- OECD 국가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은 고용률이 높음
- 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

◆ 우리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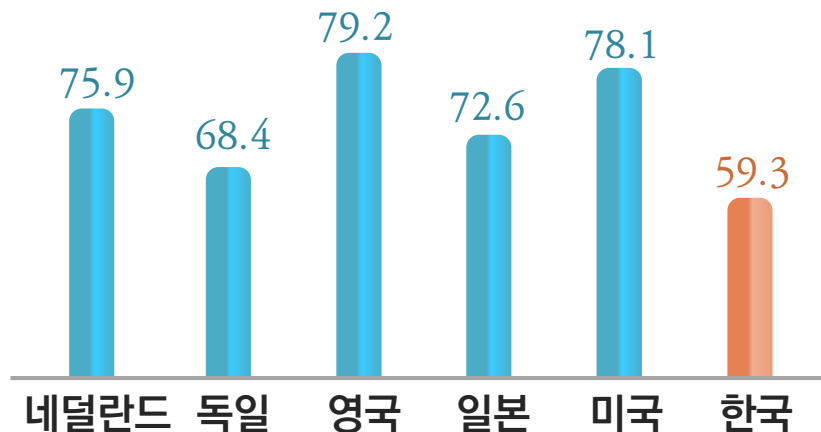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 비중(%): 네덜란드(75.9), 독일(68.4), 영국(79.2), 일본(72.6), 미국(78.1), 한국(59.3)

주요국가의 고용률(15~64세)과 서비스산업 비중

| 고용률



| 서비스산업 비중



* 자료: OECD 2015, 2013년 기준

노동개혁이 지연되고 서비스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고용률이 낮음

경기적 요인

- ◆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장기화
 - 세계 교역량 감소 추세
 - 중국·유럽의 경기 침체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 ◆ 경직적 노동시장
- ◆ ICT 등 전문인력 미스매치
 - 교육개혁 지체
- ◆ 고령화·정년연장
 - 청년실업 증가 가능성

고용률
정체

서비스산업 등 경제 혁신 지체

- ◆ 서비스산업 발전 지체
- ◆ 신산업 출현 지연
 - 직업 수(개): 한국(11,655), 일본(16,433), 미국(30,654)

일자리 정책의 비효율성

- ◆ 낮은 실효성
- ◆ 정책과 현장의 괴리




국민들도 노동개혁과 서비스업 발전에 가장 큰 관심


◆ 국민과 전문가 모두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지적

국 민

- 
- 1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
 - 5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

전 문 가

- 
-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3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 5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

IV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전략

국정운영의 방향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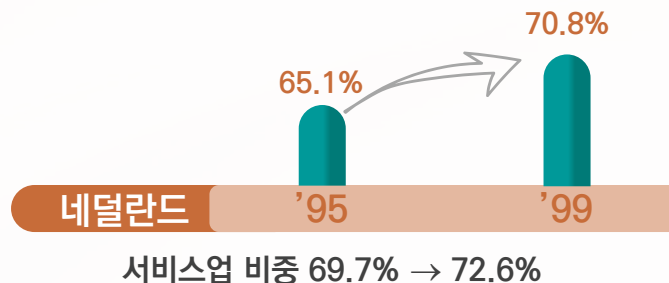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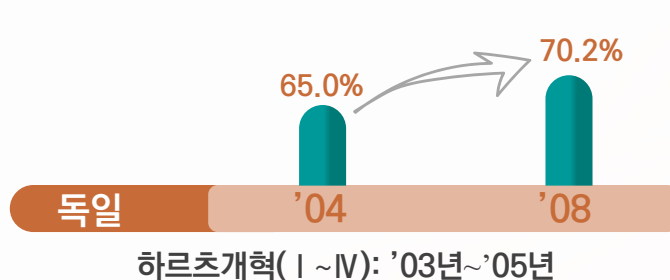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
으로 재구성

노동개혁 완수

교육개혁으로
노동개혁
뒷받침

기대효과

- ◆ 노동개혁 완성 및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1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잠재성장률 1.25%p 상승(IMF WP 2014) ⇒ 일자리와 성장의 선순환 창출
- ◆ 독일·네덜란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단기간에 고용률 70%대 진입



V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체계

범부처 집행체계를 구축하여 고용률 70%달성에 정부역량을 총결집

1

거시경제를 성장률과 함께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

2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 전면 실시

65.7%
2015년

70%
2017년

추진 체계

경제부총리 중심의 추진체계 운영

- 경제관계장관회의 중
월 1회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로 개최
 -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효과와
주요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 점검
- * 7월중 상반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상황 전반을 평가

소관부처별 책임제 도입

- 부처별 소관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

부처별 일자리확대 방안(예시)

산업부	ICT 융복합산업 활성화
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문화부	관광 서비스산업 활성화
국토부	도시첨단산업 조성
미래부	신산업 (IoT, 빅데이터 등)육성

청년·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영

- 기재부·고용부·교육부·여가부
합동의 별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여성 고용대책 마련
- *추진일정(예시) : 청년 3월, 여성 4월
- 대책 발표 후 매월 이행상황 점검

VI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방안

청년·여성·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추진

청년



여성



중장년



추진전략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수요맞춤형 직업능력개발

('15년 고용률 41.5% → '17 46.6%)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유연근로제 확산

('15년 고용률 55.7% → '17 61.3%)

- 일자리 창출
- 재취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15년 고용률 65.9% → '17 67.9%)

정책과제

-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병행제 개편)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고용 서비스 기관간 협업 강화
- 저소득청년 지원 강화
-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

- 스마트 근로감독 등 중소기업·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
- 전환형 등 시간선택제 확산
- 맞춤형 보육지원 확충
- 경력단절 여성 원스톱 재취업 지원
-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현장 실천 확산

- 뿌리산업 파견 확대 등 일자리 창출
- 실업급여 지급수준·지급기간 확대, 재취업 지원 강화

관련입법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 기간제법(2년+2년)

- 중장년일자리법(파견법)
- 고용보험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실현을 위한 두가지 중점과제를 토론

1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 전략



2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 방안

